

1. 총평

2014년 서울시 7급 행정학은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2013년 서울시 7급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2013년 서울시 7급 문제의 경우 난도가 매우 높았음). 난이도를 보면, 먼저 상급이나 중상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제 정도 있다(2013년의 경우 상급이나 중상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가 7문제).

난이도	문제 수		해당 문제 번호
	2013년	2014년	
상 급	4문제	2문제	4, 7
중상급	3문제	2문제	5, 10
중 급	6문제	10문제	1, 2, 3, 6, 11, 12, 14, 16, 18, 20
중하급	3문제	4문제	8, 9
하 급	3문제	2문제	17, 19

이 정도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매우 우수한 점수이고, 90점에서 85점 이상은 우수, 80점에서 75점까지는 보통이며, 70점 이하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점수이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4	개념문제	1
정책학	2	이론문제	13
조직이론	4	법령문제	5
인사행정론	2	학자문제	1
재무행정론	4	사례문제	0
지방자치론	3		
행정환류론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항상 강조하지만 영역별 출제빈도에 민감할 필요 없다.

문제유형별 출제빈도를 보면, 개념 및 이론문제가 14문제, 법령 문제가 5문제, 학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1문제(2번 문제)로서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는 무난했다고 본다(6번, 8번, 9번처럼 학자들의 이론을 묻는 문제라 하더라도 특정 학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론으로 분류함).

3. 문제의 분석 및 공부 방법

- 1) 상당수의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최소한 1번 이상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행정학 공부를 할 때는 우선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 2) 새롭게 출제된 문제는 4번, 5번, 7번, 10번 문제로 대체로 상급이나 중상급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특히 4번이나 10번 문제는 정답에 일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에 새행정학(이중수 외) 책 등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교재에서 출제된 문제도 있다(5번, 7번, 10번). 따라서 이는 기출문제를 중시하면서 공부해야 하겠지만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상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등도 함께 풀어보는 것이 좋다. 이번 시험 문제의 경우 5월 6월에 진행되었던 알파행정학 모의고사 강의 들었던 사람이라면 예상문제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봄, 해설 참고 문제에 일부 올림)
- 3) 이번 시험에서는 법령 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다. 법령 문제는 평균적으로 3~4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알파행정학개론 기본서에 있는 법령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령 내용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암기가 병행되어야 한다[14번 문제의 경우 범여외교관 재경선(범여권에서 외교관을 재경선해서 뽑자)으로 암기].

4. 당부의 말씀

- 1)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과 학자 이론)은 암기해주면 된다.
- 2)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는 합격이라는 행운은 필연이 될 것이다. 7급 수험생의 경우 아직 국가직과 지방직 7급 시험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적당한 휴식을 취했으면 지방직 시험을 위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험문제가 앞에서 설명하였다시피 어렵게 출제된 만큼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 제외)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 시·도의원과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 ③(틀림).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④(틀림).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이다.
- ⑤(틀림).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다. 한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804-805

2.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해설] ①(옳음)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닌 재화이다.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옳음)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가 집단적 또는 사회적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옳음)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④(논란) ①②③⑤번 지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출처자는 ④번 지문을 틀린 것으로 보고 출처했다고 본다. 그런데 Hardin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절제·제한 기제를 만드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현실적으로 모든 공유자원에 소유권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다나 공기가 그렇다. 둘째 사유화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사람들이 정보보다도 그냥 버리는 편이 비용이 적다는 점을 알아채고 모두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준보다도 더 황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Hardin은 세금 및 제재를 절제의 법제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는 정부가 맡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감시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Coase와 같은 학자들은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도 공유지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코즈는 재산권이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경우 외부성의 본질은 상호성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④번 지문에서 Hardin이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는 표현을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⑤(옳음) 공유재는 경합성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 자원이다.

<Garre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1968)>

- ①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인 목장에서 농민이 개인적 이해타산으로 양을 많이 방목할수록 결과적으로 지나친 방목이 전체 농민의 비극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② 지하자원, 초원, 물(공동유물, 지하수, 바닷물 등),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 등과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게 되면 이를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 ③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자원의 이용에 대해 적절히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 낚시면허제와 같은 정부규제)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 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정답] 논란 있음(④)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78

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
-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 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해설] ②(틀림).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⑤(옳음) 물적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볼 때 동시에 발생하지만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모의고사 문제]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이다.
- ② 사회자본을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자본은 그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 ③ 사회자본은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다.
- ④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경제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에 해당한다.
-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는 물적자본의 교환과 달리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④

[정답] ②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131-133

4.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 ③ 평가 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 방식이다.
- ④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해설] ①(논란) 특정평가는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특정평가 중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2006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갈등 해결사례를 평가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①번 지문을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것은 논란이 된다고 본다.

②(옳음)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옳음) 특정평가는 하향식 평가방식이고, 자체평가는 상향식 평가방식이다.

④(옳음) 특정평가는 국정여건 및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제고하는데 관심을 둔다. 특정평가 중 "특정과제평가"는 기관단위 평가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평가수단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생산 및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특정평가에서는 녹색성장 부문의 평가가 추가되었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 정책으로서 정권 차원의 관심 사항, 대규모 국책사업, 범부처간 참여와 협력 필요, 장기간의 추진 기간 소요 등 "특정과제평가"의 대상사업과 상당부분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⑤(옳음)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논란 있음(①)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376

5.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 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해설] ①(틀림). 지문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②(틀림). 지문은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내적 타당성은 실험 내에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정책(처치)과 결과 간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정책이 집행된 후 결과변수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변화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③(틀림). 양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고, 질적 평가는 주로 귀납적 방법을 활용한다.

④(틀림). 논리모형(logic model)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모형으로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 지문의 경우 평가의 '타당성'을 '신뢰성'으로 바꾸어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⑤(옳음).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며 성과계획서상 전체 성과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단위사업)가 대상이 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를 사용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한 후 사업별로 단계 등급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성과에 따라 사업별 예산 증액 또는 감액 형식으로 환류된다.

[7급 연강반 3순환 모의고사강의]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양적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이 활용되고, 통계, 실절치, 비율 등 수치화되어 있는 강성자료(hard data)가 활용되며, 객관적인 평가가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② 질적 평가는 주로 귀납적 방법이 활용되고, 연성자료(soft data)가 활용되며,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 ③ 논리모형(logic model)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밝혀준다.
- ④ 목표모형(target model)은 프로그램 목적 달성 여부를 선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단순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⑤ 목표모형은 정책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정답] ⑤. ⑤번 지문은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⑤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363

6.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퀴너와 로보그(Quinne & Rohrbaugh)의 경험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 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 유형이다.
-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해설] ④(틀림).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은 합리목표모형으로, 합리목표모형의 목표가치는 생산성 및 능률성이다. 한편 조직 외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중시하는 모형은 개방체제모형이며, 개방체제모형의 목표가치는 성장과 자원 확보이다.

구분		초점	
		내부(인간)	외부(조직)
구조	융통성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가치 : 인적 자원 개발 ●하위 목표 : 응집력,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가치 : 성장, 자원 확보 ●하위 목표 : 융통성, 외적 평가
	통제(안정)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가치 : 안정성, 균형 ●하위 목표 : 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가치 : 생산성, 능률성 ●하위 목표 : 기획, 목표 설정

[정답] ④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418

7.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 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①(옳음)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규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여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도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질 높은 규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②(옳음)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상이한 측정방법을 통해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 때 다양한 분석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적 협상 혹은 조정과 선택이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은 이러한 정치적 협상과 조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논란 있음) 규제영향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 의사결정도구이다(이종수 외 새행정학2.0). 그런데 정부규제개혁업무팀 신설·강화 규제심사와 기존 규제 중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개혁으로 나눌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에 대한 것으로서 사전심사제이다. 한편 기존 규제 개혁프로그램에는 규제정비종합계획, 규제일몰제, 규제등록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중소기업규제차별화, 규제맵 작성 등을 들 수 있다. ①②④⑤번 지문에 잘못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이 구별하는 시각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개념적 정의에 비추어볼 때 논란이 있다고 본다.

④(옳음)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심사에 규제영향분석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⑤(옳음) 규제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규제심사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 대안 검토,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의고사 문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
 ②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
 ⑤ 정부규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⑤

[정답] 논란 있음(③)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98-99

8. 베버(M. 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형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해설] ③(틀림). 근대적 관료제의 직원 임명의 기준은 정치적 전문성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자격이다. 대령이나 장관은 순수형 관료제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③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440

9.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 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 ③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
-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 ⑤ 고층적·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

[해설]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은 Y-이론적 측면에서의 관리 전략에 해당한다. 목표관리제(MBO)는 상하 조직 구성원의 참여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 하에 부과하여, 수행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목표관리제는 협동과 참여, 그리고 자기 통제를 강조한다(분권적 관리 기법). 목표관리제에서는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D와 마찬가지로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이론으로서, 통합형의 관리 전략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508-509

10. 조직문화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적 접근 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 ② 문화강도적 접근 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③ 특성론적 접근 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 ④ 상황론적 접근 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 ⑤ 문화유형론적 접근 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

[해설] ④(틀림). 지문은 문화강도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법>
 ① 특성론적 접근 방법 :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하여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② 문화강도적 접근 방법 :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③ 상황론적 접근 방법 :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들 간의 적합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조직 내·외의 다양한 모순된 요소들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고, 마치 무질서보다 질서가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④ 문화유형론적 접근 방법 : 각각의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문화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들의 내용을 용이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분석 방법이며, 아주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문화유형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방식인 경쟁가치모형은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증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

11.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해설] ①(틀림).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③(틀림).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다.
 ④(틀림).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도 포함된다.
 ⑤(틀림).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클 경우 기업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민간조직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모의고사문제]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진다.
 ②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본다.
 ③ U형 구조보다 M형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본다.
 ④ 공공조직 구조설계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

[정답] ④

[정답] ②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191-192

[해설] ⑤(틀림). 시민의 행정참여는 시민의 정책순응성을 높여준다. 즉, 참여적 의사결정은 결정내용의 원활한 집행을 돕는다. 즉, 참여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여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 ⑤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796-797

20. 최근 정부의 '정부 3.0'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②(틀림). 정부 3.0은 유무선 모바일기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는 정부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③(옳음). 정부 3.0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다.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정답] ② ☞ 참고 : 2014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949-950